



더불어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백혜련, 전혜숙 최고위원, 송 대표, 윤 원내대표, 김용민, 강병원 최고위원.

‘호남 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입성 실패

‘텃밭’ 호남 정치력 약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호남 단일후보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하면서 ‘호남 정치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한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결과 당대표에는 송영길 의원이, 최고위원에는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의원이 당선됐다.

서삼석 의원은 황명선 논산시장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중 최하위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서 의원의 최하위 득표율에 충격적인 모습이며 원인 분석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지역별 분포는 호남 출신 수도권 인사들을 포함하면 호남지역이 전체 40% 가량 차지하고 있어 ‘호남 단일후보’의 낙선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서삼석, 국회의원 중 최하위 대의원·권리당원, 호남 40% 계파·지역 역할론 부재 원인

최고위원은 1인 2표제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한 명과 다른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어, 경선 초반 호남 표반 일정 부분 결집하면 서 의원의 당선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서 의원의 전국적 인지도가 약하고, 선거가 계파별 결집으로 흐르면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

투표 결과 ‘친문’ 성향의 표가 견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계파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서 의원이 상대적으로 약전고투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17명의 역할론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호남 단일후보’를 지

지하는 모양새였지만, 호남지역의 정치력 확대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후보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15일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광주·전남 18석을 모두 석권한 데다 13명이 초선으로 채워져 우려됐던 ‘호남 정치력’ 약화가 현실화됐다.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고흥 출신, 백혜련 최고위원이 장흥 출신으로 지역 배려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광주·전남의 현안 정책이나 정치적 안배를 지도부에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고위원에 낙선한 서 의원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최고위원을 바랐던 호남과 민주당원 여러분께 특히 송구스럽다”며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을 잊지 않겠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쇄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기자

민주 탈당 이력 감점 대상 ‘수두룩’...광주·전남 술렁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경선 25% 감산·합당 자동복당자도 포함 감점 대상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원·출마예정자 ‘좌불안석’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뒤 복당한 후보에게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은 좌불안석인 반면, 당을 고수한 인사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3일 광주와 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 2일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한 탈당 경력자에게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엄격하게 이를 적용키로 한 것

이다. ‘경선 페널티’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입지자들 사이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가 여럿 해당된다.

광주는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나 다른 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단체장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A군수는 ‘안철수 바람’ 때 다른 당으로 옮겼다가 지난 2월 4년여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전남 B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방식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1년 만에 다시 복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단체장이나 지방

선거에 도전할 예비후보 중에는 이른바 ‘안철수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되돌아온 후보들은 수두룩하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 C의원, 전남 D·C의원 등이 감산 적용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E의원은 “민주당을 줄기차게 지원 당원과 탈당 후 복당한 인사는 확실하게 차별을 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을 거친 전직 의원 F씨는 “내년 대선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선거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열됐던 호남도 다시 모여 대선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차기 대권 선호도, 윤석열 32% 이재명 23.8% ‘양강 공고’

이낙연 9% ‘한자릿수’...홍준표 5%·오세훈 4.5%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 자릿수로 추락해, 4·7 재보선 이후 대선 구도가 빅3(Big3)에서 양강구도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명을 대상으로 4월 차기 대선주

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총장은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2.0%를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는 한달 만에 반등하며 2.4%포인트 상승, 23.8%로 뒤를 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1.9%P) 밖이지만 재편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9.0%를 기록, 리얼미터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재명 무소속 의원 5.0%, 오세훈 서울시장 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정세균 전 국무총리 4.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유승민 전 의원 2.1% 순이었다.

4·7 재보선 참패로 타격을 입은 이낙연 전 대표가 주춤하며 여야 대권구도가 윤석열·이재명 양강으로 고착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독자 신당 중 거취를 둘러싼 장교가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행보를 시작했지만 친문 제3후보론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은 뉴시스에 “제3후보로 얼굴을 내미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모두 한 자릿수”라며 “대선 12개월 이내에 최소 두자릿수 지지율을 한번 보여줘야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현 구도에서 제3후보가 여당 대선주자로 나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정의당 “文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

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